

文 “성공적 방역에 경제 빠르게 회복 中… 백신수급 원활”

文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韓 인구 두배분량 백신 확보
상반기 접종목표 상향 기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 방역’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방역과 접종에 계속 협조해 주면,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관련 논란과 별개로 문 대통령이 경제 회복 차원에서 발 빠른 접종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스

병원과 시설에서의 면회가 허용되고, 자가격리 면제도 받는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그 혜택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백신 수급 지원 논란과 관련해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을 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를 1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 11월 접종면역 달성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 논란이 거세진 데 대해서는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앞당겨 들어온다.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께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과 국민편의 서비스 확대 등도 주문했다. 11월 접종면역 달성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접종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게 백신 접종의 효율성과 속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백신 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산 제품들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내년에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백신 허브’로 한 국가 지목되는 상황을 두고 “백신 생산의 최적지로서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된다면, 국내는 물론 아시아 등 전 세계 백신 공급지로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목표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행정·외교적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6~700명대를 기록하는 데 대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면서도 “인구 3000만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 코로나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제적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라는 K-방역의 장점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필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홍남기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할 것”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에 안착할 때 까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재정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국이 효과적 방역조치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으로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하며 올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장세가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모여 회의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그린·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만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 성장 정책을 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1회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

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재무장관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백신 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역내 경제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국가 간 불균등한 회복 속도,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높아진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원승일 기자

울산·부산 등에 720억 투입 고용안정 대응

고용부, 최종 협약지역 4곳 선정
연간 40억~140억 최대 5년 지원

울산(자동차), 부산(기계부품) 등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정부가 5년간 최대 7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울산과 충남, 광주, 부산 컨소시엄과 함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최종 협약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3일 울산시 경제진흥원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해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역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사후적 대응을 하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연간 40억~14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적 친환경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근로자 이·전직 등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를 포함해 지역 사정에 맞는 대책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달까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와 사업 컨설팅을 거쳐 울산(북구·울주군), 충남(보령·아산·서산·당진시), 광주(북·광산구), 부산(사상·사하·강서구) 4개 지역을 최종 협약지역으로

선정했다.

울산 자동차(82억5000만원), 충남 석탄화력발전·자동차(81억9000만원), 광주 가전·자동차(88억5000만원), 부산 기계부품(81억3000만원) 등이 주요 일자리 사업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울산시 업무협약식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자동차 산업이 큰 변화에 직면해 있고, 국내 최대 자동차 산업 집적지인 울산은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이번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존 내연차 중심의 부품기업들의 전기차·수소경제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과 산업구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 이동 및 신규인력양성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

文, 송영길 대표에 “원팀 중요… 부동산·백신 최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송영길 대표와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게 ‘원팀’ 중요성을 강조했다.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위기에 직면한 만큼 문 대통령이 당·청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용빈 신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송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5분간 이뤄진 첫 전화통화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송 대표에게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송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 뒤 “송 대표가 화합적이시니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 당원들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지지해준 것으로 안다”며 “당·정·청이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송 대표가 잘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 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점을 언급하며 “송 대표 이야기처럼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당·청 간에 호흡을 잘 맞춰 해결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용빈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1년 동안 백신과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민생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앞장 서 달라는 (문 대통령)

의) 부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당·청 관계 설정과 관련 “(문 대통령과 송 대표 간 전화 통화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개 인사 자리에서 ‘당이 정책 중심으로 지도해 달라’는 청와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만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 선거에 함께 한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송 대표에게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송 대표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처음 자세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최영훈 기자

건설업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

공정위, 위반혐의 등 25개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직권조사 대상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가 부당해야 할 치료비나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과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분진민원처리비용,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